

경제 위기와 일자리 위기 극복 방향

황 덕 순*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누구나가 1월에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더 없이 무겁다. 우리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조차도 낙관적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BRICs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흥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디커플링(decoupling) 논의는 이미 흘러간 옛 얘기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30여년간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탱해 오던 국제적 불균형, 즉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소비하는 미국과, 미국의 과소비를 엔진으로 한 세계경제의 성장, 이를 뒷받침한 흑자국으로부터 적자국 미국으로의 국제적 자본이동이라는 세계경제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미봉책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미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외환과 금융부문에서 시작한 위기 상황이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자리이다. 1997년 말의 외환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실업대란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초래할 일자리의 위기를 더 없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경제 위기와 실업대란을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난 경제 위기와 위기를 극복해 냈던 경험을 성찰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0년대 말 경제 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전개과정이 급박했다는 점이다.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IMF의 정책 처방을 따라야 했다는 정책변수의 영향도 있었지만 위기는 시작과 함께 빠르게 심화되었고 실업자도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호조건과 IT붐으로 상징되는 내수의 회복에 힘입어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위기에 빠져들던 때만큼이나 빠르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실업대책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던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정책 처방’은 무엇이든 사용해야 했다. 1995년에 도입되어 막 걸음마를 시작한 고용보험은 곧바로 모든 사업장과 임시직·시간제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늘어나는 빈곤층을 감당하기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시행하였다.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약 40만 명이 전국에서 참여하던 공공근로는 일자리 부족과 그에 따른 생계곤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처방이었다.

위기가 지나고 나서 한숨을 돌렸을 때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이 있다면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이다. 공공근로의 경험으로부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경로를 찾아냈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때가 1930년대 대공황기이고, 전후 서구의 사회복지제도 발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경험은 예외적이기보다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발전경로에 가깝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일자리 문제의 전개과정, 일자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과거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위기의 근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기의 진행속도도 다르다.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경제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는 그 속도를 비교하기 어렵고 실업자도 급격히 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모두 경제상황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실업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 꺼풀 껍질을 벗기고 보면, 일자리 문제가 실업자 급증이 아니라 취업자 증가가 빠르게 둔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낮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이 공존’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오래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위기가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학교를 마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실업률 이상으로 더 큰 문제가 취업자가 더 이상 늘지 않는 현상,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희망을 잃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현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의 경제 위기 때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실업률이었다면, 지금은 실업률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 대책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화된 정책수단이 과거보다는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시적이지만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실업급여,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의 재취업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이 많이 확충되었고, 늘어나는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우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아직까지는 실업

자가 빠르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더 생산적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물론 여전히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넓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충실하지 않다. 무엇보다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 때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활성화(activation)를 위해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자원정책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데 주목한다. 이 정책을 뒷받침할 만큼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법으로 뒷받침되는 제도가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도 이쉽지만 이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수출전망은 매우 어둡고, IT붐에 비견될 만한 안으로부터의 성장동력이 무엇이 될지도 불분명하다. 경제 위기와 일자리 위기의 전개과정이 느린 만큼 그로부터 벗어나는 과정도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길고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제시한 녹색 성장과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흐름과도 맥이 닿아 있고, 선진국을 추격하면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앞선 나라들과의 격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녹색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IT붐에 비견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려스러운 것은 녹색성장이나 녹색뉴딜에 대해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커다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지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8년 2월의 노사정 대타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해법을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험과 성과로부터 출발하는 데서 찾았으면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녹색을 칠한 회색성장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로 둔치를 덮었다가 다시 생대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간 한강변 정비의 경험, 환경친화적으로 하천을 되살린 여러 지역의 경험들, 탄소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운 신재생에너지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지역 사회의 시도들에서 배워야 한다. 지역사회공동체의 삶의 질 개선과 국토환경 보전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KL**